



| | | | | | |
|---|--|---------------------------------|---|-----------|--|
|  | | 보 도 자 료 | | 수도권매립지 종료 | |
| | | 배포일자 2022년 1월 12일(수) 총 2매 |  환경특별시 인천 | | |
|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과 | 담 당 자 • 해상풍력TF 팀장 유강환 ☎458-7136 • 담 당 자 이병일 ☎458-7137 | | | | |
|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 지역 소통과 상생 강조
-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대 형성,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등과의 상생 요청 -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을 재차 주문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시의 입장을 공문에 담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지역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업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이고, 특히 지역주민·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 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일부 사업자가 지역주민·어업인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갈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측에 ①풍황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부터 주변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 조업 어업인, 관계 기관에 사업 내용을 공유할 것, ②사업 진행의 각 단계마다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주민·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는 해상풍력 사업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어업인들과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소통해 지역과 상생·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Offshore wind power)은 풍력터빈을 호수, 연안 해상과 같은 수역에 설치해 그 곳에서 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인천권역 해상에 총 3.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전사업자 4곳이 옹진군 덕적도 해상, 굴업도 해상 등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